

■ 지식 정책 동향(2000. 10. 21. ~ 11. 18.)

<p>정통부, 사이버테러 방지 센터 설립(10. 30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정보통신부는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에 대한 사이버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 「정보공유·분석센터」를 설립할 계획임 ▶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 요령, 침해시 경보·분석 등에 관한 정보를 가입기관 등 관계기관 등과 공유하여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할 계획임
<p>정통부, 정보통신교육 에 600억원 투입(11. 6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정보통신부는 2001년부터 2년간 총 600억 원을 투입, 대학의 관련 학과를 실질적인 정보통신 전문인력 양성소로 육성하기로 하는 것 등 정보통신 정규 교육기관에 대한 시설 및 장비 지원 계획 ▶ 특히 석박사급 고급인력을 중점 육성할 계획이며, 실효성 있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금액을 현실화할 계획임
<p>정통부, 정보통신 핵심부품 개발 사업 (11. 9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정보통신부는 2005년까지 정보통신 핵심부품 개발, 부품 개발기반 조성, 표준화, 인력 양성을 통해 정보통신 부품 국산화율을 80%까지 높일 계획임 ▶ 차세대 인터넷, 광통신, 디지털 방송, 무선통신, 컴퓨터, 인터넷 정보가전, 디스플레이 등에 대한 공통 부품을 집중 투자
<p>정통부, 무선인터넷 활성화 대책 (11. 15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사업자·컨텐츠제공업자, 솔루션 개발업체 등과 함께 무선 인터넷 컨텐츠 유료화를 비롯해 기술 개발·표준화 지원·법제도 정비 등 M-커머스의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임 ▶ 또한 현재 정보통신정책연구원,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등을 통해 실시중인 무선 인터넷 통계조사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제공할 계획임
<p>산자부, 벤처기업 활성화 정책 추진(11. 16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산업자원부는 코스닥 활성화를 위한 벤처기업 확인제 강화, 엔젤 투자 자금지원 확대 등을 중심으로 벤처지원 정책을 실시할 계획임 ▶ 「벤처기술 평가기관 실명제」 실시 등 벤처기업 평가를 내실화하고,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강화
<p>과기부, 영국과 과학기술 공동 연구(11. 13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과학기술부는 영국과 공동연구기금 사업으로 「광섬유 증폭기용 신물질 개발」 등 13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함 ▶ 한국자원연구소와 영국지질조사소간에 지질 조사, 자원 탐사, 토양 환경 분야 등의 협력도 활성화시킬 계획임

■ 사이버테러 방지 정보 공유, 분석 센터 설립

□ 추진 배경 및 내용

- 정보통신부는 주요 정보통신기반 시설에 대한 사이버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 정보공유·분석센터를 설립할 계획임
-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 요령, 침해시 경보·분석 등에 관한 정보를 가입기관 등 관계기관 등과 공유하여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할 계획임
- 금융분야는 금융감독원 주도하에 올해 안에 설립하고, 통신분야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주도하에 2001년 상반기 중에 설립
- 정보공유·분석센터를 공익성 위주로 운영하되, 정부는 센터가 수행할 최소한의 기능과 역할만을 제시하고 민간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방침

□ 추진 효과

- 전자상거래 시장 확산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는 사이버 테러를 방지함으로써 개인 정보 보호 및 시장 활성화 기대
- 전자상거래 시장 활성화의 가장 큰 요인인 사이버 테러의 위협을 방지함으로써 개인이나 기업이 안심하고 사이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됨
- 또한 사이버 테러에 대한 기술 개발을 통해 관련 산업이 동반 성장하는 산업 육성 효과도 기대됨

□ 추진 과제

- 빠른 기술 발전 속도, 신속한 대응 능력 등에서 민간의 자율성과 참여도를 높이는 것이 성공의 관건임
- 정보통신 기술은 해커들에 의해 발전된다고 할만큼 해킹 기술의 변화 속도가 빠르며, 해킹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은 대응의 신속성에 달려 있음
- 따라서 사이버테러 방지 정책의 성공 여부 또한 민간의 참여도를 높여 기술 개발을 가속화하고 대응 능력을 키워나가는데 달려 있음

■ 신광철 연구위원 kcshin@hri.co.kr ☎3669-4036